

백기 든 무능 정책...의정 갈등, 결국 시민들만 피해

원점 회귀한 의대 증원에 비난 불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자 광주·전남 시민들 사이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원칙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더니, 이마저도 갈등만 빚고 원칙 없이 끌려다니다 결국 백기를 들어 이 과정에서 힘들게 버텨온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 증원'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당초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

내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 “대국민 사기극” 시민·장애인단체도 비판...의대 준비해 온 수험생들 혼란 불가피

지만 복귀한 뒤 집단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또 다시 의대생들에게만 원칙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조건 없이 의료계에 항복했다”고 날선 목소리로 비판했다.

환자들을 볼모 삼아 의정갈등을 지속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모됐는데도, 결국 아무런 성과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3월 내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고 수업이 정상

화되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정부가 의정 밀실 야합을 자백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가 어설픈 개혁 정책을 추진해서 의정 갈등 속 사망한 이도 있었고, 병원 진료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시민, 의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귀담아 들어서 의대 정원 조정을 재차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도 ‘답답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치료 일정이 더욱 밀려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는데 사과나 반성 등도 없이 요구대로 다 들어줬다는 것이다.

최인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충치 치료를 해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 대학병원 마취과도 밀리면서 예약을 해도 두세달은 기본적으로 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장애인에 취약계층으로 밀려나 있고,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무도한 정책을 펼쳐 장애인들은 더 큰 피해를 봤다. 다시는 장애인들, 시민들을 궁지에 모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교육부의 예고 없는 정책 변화로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5년 간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진학, 편·입학 등의 준비를 해 온 예비수험생들과 학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입시 정책은 의대처럼 부분적으로 손을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인데, 의대 정원 하나만 두고 정부 차원에서 선전포고를 해 버리면 입시마저도 혼란이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판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놓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유스퀘어 2층 상인들 “저희 아직 영업합니다”

6월말 영업 종료 앞둔 식당 16곳 확장공사에 2층 가는 길 막혀 가림막에 에스컬레이터 통제도 방문객 확 줄어 매출 피해 호소

“저희 영업합니다. 찾아오시면 정상껏 모시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확장공사를 준비하면서 유동인구가 주로 이용하던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하 유스퀘어) 2층 통로가 폐쇄되면서 2층에 입점한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유스퀘어상인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유스퀘어 CGV 영화관이 문을 닫고 철거 작업에 들어가면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유스퀘어 2층 식당가로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통제됐다.

2층 CGV 영화관에서 유스퀘어 2층 식당가로 가는 길목도 가림막이 세워져 원활한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유스퀘어 2층에 입점한 상가는 모두 16곳.

이들 상인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영화관 방문객이 이동해 찾아오기 힘들어지면서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손님들이 주로 출입하던 영풍문고 입구 에스컬레이터가 통제되면서 2층 식당에 대한 관심이 꺼지는 상황이 됐다.

상인들은 오는 5월로 예정된 1층 상가 공사까지 시작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만 남은 기간 적자만 쌓다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최기주 유스퀘어상인회 회장은 “2층 상인들이 보통 150~200명 크기에 직원들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2층 식당 운영중’이라고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상인회는 오는 6월 30일 영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최근 ㈜신세계·유스퀘어 운영본부 등에 ‘영업 종료 및 보상 요청’을 했다.

유스퀘어 운영본부 관계자는 “상인들과 계약 주제를 찾아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MZ세대 공무원들 “5·18 배워요” 17일 광주시 서구청 소속 MZ세대 공무원들이 치평동 5·18 자유공원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재현한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MZ세대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5·18기념화센터, 전일빌딩 등 관련 공간을 탐방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김진수 기자 jeans@

일탈 변호사들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형

“보석 시켜주마” 청탁금 받고 재판장에 전화로 “잘 검토해 달라”

수감 중인 건설업자를 보석시켜 주겠다며 청탁금을 받고, 재판에 앞서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동욱)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B(63)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

(61)씨는 원심(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A·B 변호사와 C씨에게 각각 내려진 1억 2000만원, 8000만원, 1억 4900여만원 추정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선인계약 없이 변론을 하고 2억 2000여만원(착수금 2000만원, 성

공보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당시 건설업자의 재판을 담당한 현 국민의힘 강동혁(충남 보령시 서천군)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B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하고, 건설업자가 C씨를 통해 건넨 청탁금을 A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 재직 경력, 사건 담당 판사 등과의 친분 관계가 사건의 변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뢰인들의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고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신속·공정한 재판 주제 토론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심증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권역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연합뉴스

해복한농토, 함께하는 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